특/별/대/담

멈춰 선 한반도, 인도협력의 길을 묻다: KSM 30년과 한반도 공존의 과제

KDI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은 남북관계의 단절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인도협력과 민간 차원의 접촉이 갖는 의미를 다시 검토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홍상영 KSM-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대담은 창립 30주년을 맞은 KSM-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활동 경험과 명칭 변경의 배경, 최근 북한의 민생 상황, 대북 인도협력의 제약과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담은 조동호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는 대담자의 동의를 얻어 주요 내용을 정리·수록한다.



일시 및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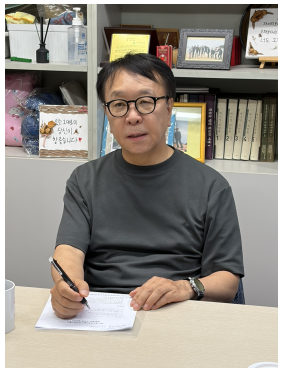
2026년 7월 2일(목), 10:30~12:30, KSM-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실

사회

조동호(KDI)

대담

홍상영(KSM-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조동호: 오늘 이 자리는 변화한 한반도 현실 속에서 인도협력과 남북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는 장기간의 대화 중단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고도화, 국제 제재의 장기화, 미중 전략경쟁과 북중러 협력 심화까지 겹치면서 남북협력을 둘러싼 환경도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북 인도협력의 의미도 다시 물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인도협력은 식량, 보건의료, 농업, 아동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지원하는 활동인 동시에, 정치·군사적 대화가 어려운 시기에도 남북 간 관계의 끈을 이어 온 통로였습니다. 남북관계의 제도적 틀이 무너지고 접촉의 공간이 사라진 지금, 인도협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관계의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은 Korean Sharing Movement(KSM)-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KSM)의 경험은 오늘의 남북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특히 KSM이 국제 사회에서 사용해 온 영문 명칭을 대표 명칭으로 앞세우기로 한 것은, 오늘의 조건 속에서 인도협력의 의미와 언어를 어떻게 새롭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KSM의 명칭 변경 문제부터 여쭙겠습니다. 30년 동안 사용해 온 이름을 새롭게 정리하게 된 배경과 문제의식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시대와 대화할 언어를 찾은 것입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 온 영문 명칭 'Korean Sharing Movement', 즉 KSM을 대표 명칭으로 앞세우고, 기존 법인명과 함께 KSM-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으로 병기하기로 했습니다.

1996년 창립 당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는 이름에는 분단과 대결을 넘어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자는 시대적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30년이 흐르는 동안 남북관계는 크게 달라졌고, 우리 사회의 세대 인식도 변화했습니다. 단체의 성격 역시 긴급구호

중심의 인도지원 단체에서, 인도협력을 통해 형성한 신뢰를 평화와 교류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가교형 조직으로 변해 왔습니다.

명칭에 대한 고민은 최근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2015년 초부터 명칭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기존 명칭이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은 존중하되, 젊은 세대와 국제 사회에 단체의 역할을 더 넓고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설문조사와 올해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56명으로부터 62건의 명칭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러 제안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이름을 만드는 것보다 국제 사회와 해외 파트너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통용되어 온 KSM을 국내에서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KSM과 병기함으로써 지난 30년의 역사성을 이어가면서도 오늘의 환경에 맞는 설명 방식을 갖추고자 한 것입니다.

이번 30주년에 "한반도와 이웃이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민족과 통일 중심의 틀을 완전히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던 상호부조와 공존의 정신을 오늘의 언어, 곧 평화・공존・다양성・연대의 언어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조동호: 다만, 실제 변경 시점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 이후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민족'이라는 표현을 뒤로 물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명칭 변경 고민을 해오셨다고 설명하셨지만,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라는 점에서,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하니 따라 바꿨다는 비판도 있을 것 같구요.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홍상영: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번 명칭 정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춘 결정이 아닙니다. KSM을 대표 명칭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2015년 초부터 논의해 온 사안이며, 남북관계의 장기 단절, 세대 인식의 변화, 국제 사회와의 소통 필요성 속에서 검토되어 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족'이라는 표현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담고 있던 역사성과 상징성을 오늘의 언어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기존 법인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KSM을 함께 앞세움으로써, 지난 30년의 경험을 계승하면서도 인도협력의 의미를 평화, 공존, 연대의 언어로 더 넓게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동호: 총장님 개인의 경험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단체 창립 직후인 1997년 봄부터 활동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안정적인 길을 두고 대북지원이라는 낯설고 험난한 일을 선택하시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홍상영: 처음부터 북한 문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북한과의 관계보다 우리 사회 내부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시민사회가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시민이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2월쯤 북한 식량위기가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졌습니다. 언론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 활동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동포라면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3월 초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간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3년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긴급한 식량난을 넘기면 어느 정도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느새 2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동호: 처음에는 2~3년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결국 30년 가까이 현장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북한 문제라는 것이, 그만큼 단순한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도 정책이나 제도의 영역으로 옮겨 가시지 않고 시민사회 현장에 계속 남아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상영: 물론 제도와 정책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대북지원은 정부의 승인, 북측의 수용, 국제 정세, 제재 환경이 함께 맞물려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민사회 영역에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는, 북한 주민을 직접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을 만들어 가는 현장의 과정에서 큰 의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물자를 보냈는지,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식량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어떻게 함께 생산할 것인지, 병원이나 생산시설을 어떻게 함께 만들 것인지로 사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것은 지원의 양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가 더 오래 남는다는 점이었습

니다. 제도와 정책이 길을 열어 준다면, 그 길을 실제로 이어 가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마와 물 한 잔에서 순두부 한 그릇까지, 관계는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조동호: 결국 현장에 남게 한 것은 숫자로 남는 성과보다 사람을 만나며 쌓인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긴급구호, 농업기술협력, 어린이 급식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셨고 방북 경험도 많으신데요. 지난 30년을 돌아볼 때, "관계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고 가장 분명하게 느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홍상영: 여러 순간이 있지만, 하나만 꼽자면 당곡리 협동농장 협력사업 과정에서 경험한 밥상의 변화입니다. 사업 초기, 관리위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사무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내온 것이 구운 고구마와 물 한 잔이었습니다. 과하지도,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은,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상을 보며 "오늘의 남과 북 관계는 고구마와 물 한 잔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함께 농장 일을 마친 어느 날에는 닭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농촌 출신이라, 어릴 적 할아버지가 귀한 손님이나 오랜만에 온 형제에게 닭을 잡아 주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쯤 지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을 때 다시 농장을 찾으니, 이번에는 집에서 만든 순두부와 깐 마늘, 간장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면 "반찬은 없는데 밥 한 술 뜨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사라졌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고구마와 물 한 잔에서 시작해 닭을 거쳐 순두부에 이르기까지, 그 밥상의 변화가 곧 관계의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물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와 관계라는 점이었습니다. 지원은 끝날 수 있고 사업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 만드는 데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저는 그 밥상에서 배웠습니다.

조동호: 방금 말씀하신 당곡리의 밥상 변화는 남과 북의 관계가 어떻게 조금씩 가까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총장님 자신의 생각도 달라진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체제와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시면서 가장 크게 바뀐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홍상영: 생각이 바뀐 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당곡리에서 벼농사협력사업을 하며 비료를 지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담당 전문가와 함께 포전을 둘러보니,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비료가 적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비료를 빼돌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북측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정이 달랐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 농지에 비료를 집중해야 사업 성과가 난다'고 생각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 작업반 농지 전체의 수확이 중요하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특정 농지에만 비료를 몰아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관계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사정을 알고 난 뒤에는 비료를 더 충분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문제는 제 반응이었습니다. 비료가 적게 뿌려져 있으면 먼저 이유를 물었어야 했는데, 저는 의심부터 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몸에 밴 반공·냉전적 불신의 반사적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북한을 믿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사건을 겪으며 북한도 우리를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추상적인 '북한'이라는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논에서 더 많은 소출을 내고 싶어 하고, 자기 작업반 전체의 수확을 걱정하는 평범한 농민들이었습니다. 협력은 상대를 바꾸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기 전에 묻고 상대의 이유를 먼저 들어 보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 이후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누가 먼저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지만, 현장에서 배운 것은 제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시지표의 회복이 곧 민생의 회복은 아닙니다."

조동호: 말씀을 들으면, 총장님께서 현장에서 만난 것은 추상적인 '북한'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은 최근 북한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학계 일각에서는 실제 주민 생활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합니다.

홍상영: 경제가 좋아졌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GDP는 2023년 3.1%, 2024년 3.7% 증가했습니다. 2024년 성장률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설명됩니다. 거시경제의 큰 틀로만 보면 분명 회복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만으로 주민 생활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분석들을 보면 북한의 시장 환율과 쌀값이 모두 크게 오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4년 1분기 8천원대였던 달러 환율이 2026년 5월 7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6만원 초반으로 다소 내려왔고, 쌀값도 2024년 초 4,800원 수준에서 2026년 6월 38,000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불안해진 배경에는 2023년 10월 이후 있었던 큰 폭의 가격・임금 조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정한 쌀값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쌀값보다 너무 낮았는데, 이 차이를 줄이려고 국가가 쌀값과 임금을 한꺼번에 크게 올린 것입니다. 문제는 임금이 오른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물가도 함께 올라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형편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배급 체계 밖에 있는 비배급 계층, 자영업자, 저소득 노동자들은 성장률 개선을 체감하기보다 물가 상승의 충격을 더 크게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영기업이나 군수공장 소속 노동자, 일부 간부층은 임금 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은 물가 폭등의 부담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경제를 "거시지표의 회복"과 "가계의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구조로 봅니다. 국책사업과 일부 산업 부문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환율과 물가가 불안정해지면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북한경제를 평가할 때 성장률뿐 아니라 주민들의 구매력과 시장의 움직임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동호: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실 텐데요. 최근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 강화는 주민 생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홍상영: 저는 북한이 과거의 계획경제로 그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30년 동안 성장한 시장을 국가의 관리 체계 안으로 다시 편입하려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1990년대 이후 장마당은 주민들의 생계를 떠받치는 핵심 경제 공간이 되었고, 국가도 이를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무역, 유통, 상업, 식량 판매 같은 핵심 영역에서 국가가 다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 관련 제도 정비, 사회주의상업법과 전자상업법 제정, 양곡판매소 확대, 외화 사용 제한 등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의도와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시장을 통제해 경제 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하려 하지만, 최근에는 환율과 물가가 크게 불안정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현금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은 구매력 하락을 더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영 유통망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 가고, 일부는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품목이나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북한경제는 국가와 시장 중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구조라기보다, 국가의 통제와 주민들의 적응이 맞물리며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취약한 주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동호: 민생을 볼 때 지역별·계층별 격차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며 지방과 농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실제 지방 주민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상영: 저는 이 정책을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2024년부터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으로 제시되었고, 이후 보건시설, 과학기술 보급 거점, 양곡관리시설 등 이른바 3대 필수 대상 병행 추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도나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었던 발전 담론을 지방으로 돌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업공장뿐 아니라 군 단위 병원, 종합봉사소, 양곡관리시설, 농촌살림집, 교육시설 등을 함께 정비하려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공장 건설을 넘어 지방 생활 기반 전반을 재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병원 건설 사례가 표준 모델처럼 제시되는 것도 이 정책이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지방 주민의 생활 조건 개선을 표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정책의 사상적 맥락도 흥미롭습니다. 북한은 과거부터 시・군 단위의 자립적 발전, 지방공업과 농업의 병행 발전을 강조해 왔고, 최근의 지방발전 정책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력갱생 노선과 최근의 농촌혁명・지방발전 담론이 다시 결합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평가는 신중해야 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과 주민들의 생활이 실제로 좋아지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공장이 완공되더라도 전기, 원자재, 노동력, 판매 시장이 갖춰져야 하고, 병원도 의약품과 장비, 인력이 함께 있어야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든 지금도 혜택은 선정 지역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과 물가 불안이 겹치면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건설사업 자체보다, 앞으로 지방 주민들의 소득과 소비, 의료・생활 여건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이 보내는 일이 아니라, 끊기지 않게 잇는 일입니다.”

조동호: 앞서 북한의 민생 상황과 당국의 경제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대북 인도협력이 어떤 길을 걸어 왔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다고 보십니까?

홍상영: 한국 NGO의 대북사업은 크게 네 단계를 거쳐 왔다고 봅니다. 1990년대 후반 식량과 의약품 중심의 긴급구호기,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농업・보건・지역개발로 확장된 협력확대기, 2010년 5.24 조치 이후의 축소조정기, 그리고 코로나 이후 접촉 자체가 끊긴 지금의 공백기입니다.

다만, 대북 인도지원의 역사를 남에서 북으로 향하는 일방적 지원의 역사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1984년 남한이 큰 수해를 입었을 때 북한이 쌀과 옷감, 시멘트, 의약품 지원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한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남북경제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남과 북이 적대 속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최소한의 관계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계별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1990년대 후반 식량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긴급구호는

2000년대 들어 농업, 보건의료, 지역개발로 협력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정성제약과의 의약품 생산협력,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사업처럼 단순 물자 전달을 넘어 생산 기반과 운영 구조를 함께 개선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즉 민화협을 공식 창구로 삼아 비교적 제도화된 방식으로 사업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5.24 조치 이후 민간 차원의 대북사업은 크게 위축되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접촉 자체가 끊긴 공백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가"가 중요한 성과였다면, 지금은 "협력의 통로를 얼마나 끊기지 않게 유지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후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변화한 환경 속에서 협력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호: 인도지원의 역사를 긴급구호에서 개발협력, 그리고 지금의 공백기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에서 가장 시급한 인도적 지원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현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홍상영: 저는 여전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 그리고 기본적인 보건의료 협력은 가장 먼저 재개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도 비교적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KSM이 과거 벼농사협력사업, 제약공장 건립,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처럼 식량 증산과 보건의료에 집중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먹는 문제와 치료받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감염병과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저희는 과거 접경지역에서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감염병은 국경을 넘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컨대 말라리아 매개 모기는 바람을 타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남쪽만 방역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접경지역 감염병 대응은 처음부터 공동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와 가뭄, 산림훼손 같은 기후위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인도협력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차원을 넘어, 남과 북이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돕는다는 언어가 강했다면, 앞으로는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웃으로서 공동의 위험을 관리한다는 언어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조동호: 최근 일부 지자체와 민간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다시 시도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현재 민간·지자체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상영: 지금은 과거처럼 공개적이고 제도화된 채널이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들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종교계 네트워크, 해외 파트너십 등을 통해 제한적인 접촉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보건, 산림, 환경처럼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개별 사업이 성사되느냐만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막혀 있을수록, 협력의 통로와 실무 경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협력이 열릴 때 과거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면,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축적한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조동호: 최근 제주도의 대북 지원사업은 5.24 조치 이후 오랜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향후 북한이 남측의 지원을 계속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홍상영: 저는 이 사례를 아직 성급하게 해석하지 않으려 합니다. 언론 보도와 제주도 설명에 따르면, 제주도가 추진한 의료기기, 산림방제 약품, 한라봉 묘목 등 협력 물품은 중국 다롄항을 거쳐 2026년 5월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남북교류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이나 남북 인도지원의 전면 재개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북 간 접촉과 교류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물자가 제3국을 거쳐 들어갔다는 점은, 오히려 이 사례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 정책 변화라기보다 제한적이고 실무적인 협력 사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와 유사한 협력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일정한 공식 채널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보건의료, 산림, 감염병, 기후위기 대응처럼 비정치적이고 실무적인 분야에서는 제한적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선별적이고 우회적인 형태일 가능성이 크며, 과거와 같은 남북 인도지원의 전면 재개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조동호: 다시 협력이 추진된다면 투명성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원 물품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홍상영: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북한 내부에서도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협력사업의 대상, 내용,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조선교육후원기금이 대표적입니다. 홈페이지에 이행한 사업과 준비 중인 계획을 구분해 소개하면서 사업의 대상, 목적, 수혜 규모, 예산,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개하고 있고, 해외 기증자와 연계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진, 시공 내역, 예산 규모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향후 디지털 기반 인도협력에서 사업 단위의 투명성을 높이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단위 수령 확인으로까지 나아갈 경우 수혜자 정보 보호와 안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수혜자의 신원과 정보가 노출될 경우 오히려 부담이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점은, 북한의 정보 공개성뿐 아니라 우리 쪽에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입니다. 북한이 제공하는 정보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 정보에 접근하고 검증하는 과정에는 여전히 제도적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디지털 기반 인도협력을 추진한다면, 개인 단위의 확인보다 기관 간 확인, 사업 단위의 공개, 공동 모니터링처럼 상호 신뢰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은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기술이 다시 불신을 키우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는 것은 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든 역량입니다."

조동호: 북한은 스스로가 '인도지원 수혜국'으로 규정되는 데 민감한 것 같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개발협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북한 측 수용성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홍상영: 저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은 인도적 지원이 중심이었습니다. 긴급한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 인도지원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개발협력의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협력은 단순히 물자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만드는 과정입니다. 농업기술, 보건의료 체계, 감염병 대응, 기후위기와 재난관리 모두 그런 영역에 속합니다.

북한이 '수혜자'라는 표현에 민감한 것은 체제의 자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성제약 협력이나 협동농장 현대화사업처럼 단순 전달이 아니라 생산 기반과 운영 역량을 함께 고민했던 사업일수록 북측의 수용성도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이라는 언어보다 '협력'이라는 언어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만, 말만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북측 인력 훈련, 공동 연구, 공동 관리처럼 호혜적 요소가 실제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이러한 협력이 실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여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엔 제재와 국내 제도는 현재 어느 정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대북 제재하에서 인도적 예외를 실제로 신청하셨을 때 가장 큰 행정적·금융적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홍상영: 대북 제재하에서도 인도적 예외는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불확실성입니다. 인도적 예외가 가능한 사업이라도 실제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융기관은 제재 위험을 우려해 송금을 꺼립니다. 운송회사도 북한 관련 사업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가능한 일이 실제로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디리스킹 현상도 큰 장벽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더라도,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예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물품을 구하고, 보내고, 확인하는 전 과정에서 막히게 됩니다.

최근 접촉 신고 관련 제도 완화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행정 지침 수준에 머물 경우 정권 변화에 따라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민간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인도적 예외와 접촉 절차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조동호: KSM이라는 민간단체 입장에서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홍상영: 저는 사업보다 관계가 끊어진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조금씩 쌓아온 관계도 단절되면 다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남북이 만날 수 있는 공간도 거의 없고, 민간이 접촉할 수 있는

통로도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어렵게 쌓아 온 관계와 실무 경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더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NGO들 사이의 경험 공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도 돌아봐야 합니다. 대북사업은 정부 승인, 북측 수용, 재원, 국제 환경, 남북관계가 동시에 맞아야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게 확보한 접촉 창구나 실무 노하우가 공동의 자산으로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 NGO들이 평양에 상주하며 UN 조정체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던 것과 달리, 한국 NGO들은 경험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체들의 신뢰가 부족해서라기보다, 대북사업의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각 단체는 협력해야 할 동료이면서도 제한된 사업 기회와 재원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협력이 열릴 때를 대비해, 민간 차원의 경험과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정부 간 대화는 중단될 수 있지만, 시민사회는 긴 시간을 견디며 관계의 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인도협력은 물자를 전달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KSM이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호: 시민사회가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인프라라고 하셨습니다만, 그 인프라가 버티려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뒷받침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평화공존' 기조 전환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접촉 신고 절차나 남북협력기금 등 제도적 변화가 민간교류와 인도협력의 공간을 다시 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홍상영: 현장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체감됩니다. 접촉 신고 절차 완화, 남북협력기금 복원, 긴장 완화 조치 등은 민간교류와 인도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다시 만들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같은 원칙을 공식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원칙은 민간교류와 인도협력의 공간을 다시 열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화공존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 남북관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원칙을 변화한 현실 속에서 다시 꺼내 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72년 7.4 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평화공존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이 문제가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특히 의미 있게 보는 지점은, 정부가 통일이라는 장기적 지향과 평화공존이라는 당면 과제를 구분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이제 질문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당장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공존 기조는 민간교류와 인도협력의 공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짚어야 합니다. 첫째, 이런 원칙과 제도 정비가 행정 지침이나 정책 기조 수준에 머문다면 정권 변화에 따라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더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재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여전히 특수관계라는 인식과 사실상의 두 국가 현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 비대칭이 정리되지 않으면 좋은 정책 문건이 있어도 실제 접촉과 교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의 정교함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공존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폭넓은 합의가 필요합니다. 평화공존은 외교정책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고,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관계의 재구축입니다."

조동호: 말씀을 종합하면, 이제 대북 인도협력은 과거의 방식을 복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달라진 남북관계의 조건 속에서 다시 설계해야 하는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대북지원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홍상영: 지난 30년 동안 대북 인도지원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한다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전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특수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통일보다는 평화와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을 갑작스러운 결정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축적된 변화가 공식화된 과정으로 봅니다. 코로나 시기의 국경 봉쇄, 북러 밀착과 북중 관계 유지, 그리고 한국을 거치지 않고도 외교·경제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북한 역시 외부 자원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흐름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될지는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도협력이 필요 없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인도협력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인도협력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면, 앞으로의 인도협력은 단절된 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협력의 근거도 이제는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기후위기, 감염병, 재난, 전쟁의 위험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함께 겪는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도협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평화는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절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신뢰를 다시 쌓고, 협력의 경험을 축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공존의 사회적 기반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의 시대에 KSM이 새롭게 제안할 수 있는 인도협력의 패러다임은 결국 '관계 재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호: 현재로서는 남북관계의 개선 전망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될 가능성에 대비해 KSM은 어떤 협력 모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홍상영: 이번 30주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도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앞으로도 긴급한 식량지원이나 보건의료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물자 지원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한 환경에 맞춰 저희는 세 가지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다자 협력입니다. 대북 제재 아래에서 인도지원 예외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재외동포, 해외 NGO, 국제기구와 함께할 수 있는 간접적·다자적 채널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후, 보건, 재난처럼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남북이 함께 겪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입니다. 감염병, 산림훼손, 홍수와 가뭄 같은 문제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의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시민사회가 긴 시간의 단절을 견디며 관계의 기억을 보존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간 대화가 중단되더라도 접경지역 평화교육, 공동기억 복원, 민간 차원의 경험 공유 같은 활동은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큰 사업을 만드는 일이라기보다, 다시 협력이 열릴 때를 대비해 사회적 기반을 남겨 두는 작업입니다.

저는 남북협력을 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끊지 않고, 다시 협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남겨두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협력이 열릴 때에는 과거처럼 물자를 전달하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KSM도 단순한 지원기관을 넘어 평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30주년 비전을 "한반도와 이웃이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동호: 말씀하신 협력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정부와 연구기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대북 인도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KDI와 같은 연구기관들에 바라는 연구 주제나 방향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상영: 정부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관계를 이어갈 최소한의 통로를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인도협력과 민간교류의 공간까지 모두 닫혀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접촉 신고 완화와 같은 조치를 일시적 행정 지침에 머물게 하지 말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간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제도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구기관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둘러싼 생태계 전체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연구자, 현장 활동가, 지자체, 기업, 언론, 정책입안자가 함께 축적해 온 경험을 다시 정리하고, 다음 세대가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KDI와 같은 연구기관에는 두 가지 역할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강도·비정치적 협력사업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축적해 온 대북협력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대북협력 연구가 지원 규모나 경제효과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협력이 어떻게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어떻게 평화의 기반이 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록과 평가가 공공의 정책 자산으로 남아야, 다시 협력이 열릴 때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는 바뀌어도, 사람은 남습니다."

조동호: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북한 주민과의 관계에서 잃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상영: 30년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정치는 늘 변합니다. 정부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남북관계도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제가 당곡리 협동농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평양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체제와 국경이 어떻게 규정되든, 그 너머에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남과 북은 고구마 하나도 쉽게 나누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고, 너무 오래 서로를 상상 속 존재로만 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길을 열 수 있지만,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게 하는 것은 관계와 신뢰입니다. 상대를 적으로만 바라보면 관계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평화의 출발입니다.

이번 30주년을 맞아 KSM은 "한반도와 이웃이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새로운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지난 30년이 인도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공존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구마와 물 한 잔을 나누는 사이에서 시작해 결국에는 순두부 한 그릇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KSM이 지난 30년간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호: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협력이 남북관계에서 결코 부차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치·군사적 대화가 멈추고 남북관계의 큰 틀이 흔들릴 때에도, 인도협력은 남과 북이 서로를 완전히 단절된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도록 붙들어 온 가장 기초적인 통로였습니다.

KSM이 지난 30년 동안 축적해 온 경험은 남북 간 협력이 어떤 조건에서 가능했고, 또 어떤 제도적·정치적 제약 속에서 중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단체의 활동사가 아니라,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다시 설계할 때 참고해야 할 정책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변화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새로운 언어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KSM의 명칭 변경도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단절의 시대에 인도협력을 어떻게 다시 말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 읽힙니다.

오늘 홍상영 사무총장님께서 들려주신 경험과 문제 제기는, 남북관계가 막혀 있을수록 시민사회가 축적해 온 현장의 기억과 신뢰의 자산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오랜 시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홍상영 사무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KSM의 지난 30년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단절의 시대에도 다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